

**1.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 ② 요금제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해설 : ① 집합재(공공재)는 등대, 국방과 같이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분할성을 띠는 재화로써 민간에서 공급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전기, 가스와 같은 요금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체감과 자연독점의 문제로 민간에 맡길 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책임경영방식)을 설립하여 공급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로 지적되고 있어 요금제에 대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적정 시장가격을 산출하기가 용이하고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시켜 시장 차별화를 강화시킬 경우 소비자 만족증대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요금제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은 보조금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면허방식은 정부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공급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귀속되므로 서비스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한다. ④ 공유지의 비극(과다소비 ⇨ 자원고갈 ⇨ 공멸)을 해결하는 전통적 방식은 정부규제(ex. 낚시면허제)와 명확한 사유재산권 확립(ex. 소유권의 설정과 세금 징수, 사용권의 설정과 사용료 징수)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제도론자인 오스트롬(E. Ostrom, 1986)에 의하여 제기된 '공동체 자체해결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이해당사자 간 공멸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와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ex. 이용자경계의 명확성,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규칙, 이용상황에 대한 감시장치, 공동체의 자치조직권 보장 등)이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61페이지). 답 : ④

(3)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 :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2013 비타민행정학 61페이지)

① 정부개입(전통적 견해)

- ㉠ 정부규제 : 과다소비 방지를 위한 정부규제와 위반시 처벌  낚시면허제, 어획량쿼터제
- ㉡ 명확한 사유재산권 확립 : 사유재산권을 확립하고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  소유권의 설정과 세금징수, 사용권의 설정과 사용료 또는 점용료 징수

② 공동체의 자율해결(E. Ostrom) : 공동체 구성원인 이해당사자 간 공멸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와 규칙 설정 - 1편 신제도론에서 다룸

③ 정부예산의 공유재성 : 예산은 공유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므로 정부예산 부족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 부처마다 총액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편성하는 제도), 총액인건비제(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 등이다.

④ 관련이론 - 침묵의 봄(Silent Spring, 1962) : 해양생물학자인 카슨(R. Carson)이 살충제의 남용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현상을 경고한 저서로서 1960년대 환경보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2.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 ② 민간이 혹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혹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 ④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해설 : 역대리인(逆代理人)이란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한 결과 오히려 대리인 문제가 심화된다는 이론으로서 민영화반대론의 근거이론이다. 민영화시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에서 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 주체가 바뀌므로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대리인문제가 심화됨으로써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느슨한 감독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뇌물제공으로 부패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이 역대리인이론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역대리인과 무관하다. ①은 복대리인 문제에 해당된다. 복대리인은 주인-대리인관계가 중첩됨으로써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으로서 민영화 이전에 발생하며 민영화찬성론의 근거이다. ②는 크림스키밍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④는 황금주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황금주방식은 황금주에 지정된 특정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놓은 방식으로서 소수의 주식으로도 정부가 주요결정을 할 수 있다(2013 비타민행정학 87페이지). 답 : ③

\* 민영화의 폐단(역기능) - 반대론의 입장(2013 비타민행정학 87페이지)

- ㉠ 공익성 포기 : 민영화 반대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민영화로 공익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전기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큰 공공재이므로 공공기관이 맡아야 하며 민영화를 할 경우 공익성이 포기된다는 것이다.
- ㉡ 안정성 저해 : 민간기업의 도산·사업포기나 민간기업 내부의 노사분쟁 격화로 공공서비스가 중지되면 국민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 ㉢ 책임성 저해 :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공공문제가 민간기업의 사적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공공에 대한 책임논의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 ㉣ 형평성 저해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가격차별이 이루어지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 ㉤ 가격 인상효과 : 수익 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 ㉥ 크림 스킴(cream skimming)현상, 탈지(脫脂)현상 : 가장 달콤한 이익만 챙기는 현상으로서, 수익 구조가 탄탄한 알짜부문만 인수하려는 사례와 민영화 후에도 혹자부분만을 운영하거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적자노선은 폐지하려는 경우가 있다.
- ㉦ 역대리인 문제 : 민영화 시 민간부문의 속성상(비밀성)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대리손실이 더욱 커지고 느슨한 감독을 위한 뇌물이 제공되므로 관료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3.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 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 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해설 : ① 19C 후반에는 비능률, 낭비, 부패를 야기했던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고 이의 영향으로 행정관리론이 대두되었는데 중심적인 화두는 능률성의 증진이 었다. 반면 합법성은 입법국가에서, 민주성은 1930년대 통치기능설과 인간관계론에서 강조된 이념이다(2123 비타민행정학 115페이지). 답 : ①

\* 행정이념의 변천(2123 비타민행정학 115페이지)

시 기	행정이론	행정이념	내 용
19세기 초	• 입법국가 • 관료제이론(전통행정론)	합법성	•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세기 말	행정관리설(기술적 행정학)	능률성	최소비용과 (양적)최대생산
1930년대	• 통치기능설(기능적 행정학) • 인간관계론	민주성	• 국민중심의 대외적 민주성 • 공무원 중심의 대내적 민주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합리성	수단의 목표 적합성과 기여도
1960년대	발전행정론	효과성	목표의 (질적)달성도
1970년대	신행정론	형평성	사회적 약자 위주의 정의추구 행정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생산성	(양적)능률성 + (질적)효과성
1990년대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론)	민주성	(참여적)민주성 + 정책효율성

#### 4.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 ② 조직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④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해설 : 판단중지와 괄호치기를 통하여 본질의 직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현상학이 행정학에 도입된 것이 현상학적 접근론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론은 인간을 주체적 행위자로 보는 비결정론적 관점에서 외면적인 인간행태의 인과적 설명보다 행위자의 내면적인 동기나 의도를 행정현상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철학적 연구방법이다. ③ 객관적 존재(Sein)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은 실증주의 방법론이며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의식 또는 마음이 빠진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상을 본질적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200페이지). 답 : ③

\* 현상학의 특징(2013 비타민행정학 200페이지)

- (1) 존재론적 차원 - 유명론 :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과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유명론(唯名論)의 입장이다.
- (2) 인식론적 차원 - 반실증주의 : 지식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현상학은 반실증주의 입장을 선호한다. 인간의 의식 또는 마음이 빠진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상을 본질적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3) 인간본성적 차원 - 자발론, 주의주의 : 현상학에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적극적·자율적 존재'로 보는 자발론 또는 주의주의(主意主義)적 입장이다. 즉 인간은 환경이나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단순 반응하는 소극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 존재로 파악된다.  
    ❖ 라모스(A. Ramos)의 괄호인(括弧人, Parenthetical Man) 종래의 조작인이나 반응인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자율성과 성찰적 사고를 갖고 조직에 참여하는 적극적 존재를 의미한다.
- (4) 방법론적 차원 - 개별사례 중심 : 인간의 의지와 동기를 중시하는 현상학은 개별사례나 문제 중심적 방법을 추구한다.

#### 5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정부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해설 : 출제자는 노화준교수의 저서에 기술된 메이(P. May)의 정책의제설정 모형에서 출제하였으나 콕과 로스(Cobb & Ross)의 모형으로도 풀 수 있었던 문제이다. 동원형(사회문제 → 정부 의제 → 공중의제)은 정부가 먼저 채택을 하고 대중지지가 낮으므로 행정PR을 통하여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형태이다(ex. 새주소사업). ①은 동원형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지문이다. ②는 정부가 채택만 하고 공중의제를 하지 않는 내부주도형(May) 또는 내부접근형(Cobb & Ross)에 대한 내용이다. ③은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외부주도형에 대한 내용이다. ④ 정치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는 외부주도형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327, 328페이지). 답 : ①

#### 6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 ③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해설 : ①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2013 비타민 행정학 304페이지). 답 : ①

(4) 정책네트워크의 특성(2013 비타민행정학 304페이지)

- ① 정책문제별 구성 : 정책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 ② 다양한 참여자 : 참여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조직이고 공식적 참여자도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도 있다.
- ③ 연계의 형성 : 참여자들은 교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연계를 형성한다. 그러한 연계는 정책선택에 관한 의사표시, 전문지식 기타의 자원교환, 상호신뢰 구축의 통로가 되며 다소 간의 의존관계와 교환관계를 매개한다.
- ④ 경계의 존재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으며 경계의 제한성과 명료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⑤ 제도적 특징 :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라고 하는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 ⑥ 가변적 현상 : 정책네트워크는 외재적 및 내재적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7 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 ② 에치오니(A.W.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 ④ 사이먼(H.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설 : ②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모형으로서 근본적 결정 이후에 하위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 결정의 경우 제한적으로 대안탐색(소수 대안만 탐색)을 하지만 포괄적으로 결과예측(세밀한 예측)을 하게 되므로 틀린 지문이다(2013 비타민 행정학 349페이지). 답 : ②

- ② 부분적 결정(bit decision) :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하층부의 결정자가 특정의 개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리는 세부적 결정으로서 심층적·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면서 근본적 결정을 구체화하거나 집행하는 결정이다. 여기서는 근본적 결정을 기준으로 하되 점증적으로 조금씩 변화된 대안을 마련하는데 점증모형에 따라 소수의 대안만 검토하되, 합리모형에 따라 결과예측은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한다(2013 비타민 행정학 349페이지).

8.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 ② 사바티어(P. 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 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 ④ 버먼(P. 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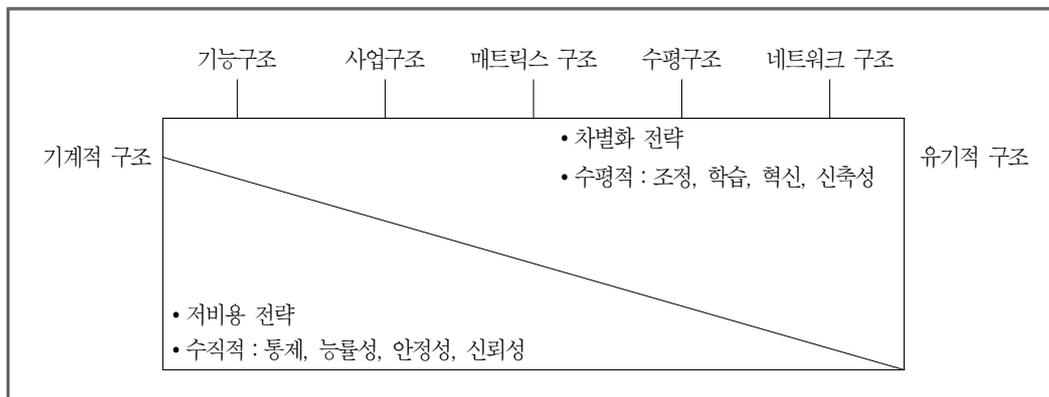
해설 : ①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 관료적 기업가는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으로, 정책집행자는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하고 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②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인 방법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들을 결합하는 것이다(정정길). ③ Lipsky가 제시한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은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그리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Lipsky는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정정길). ④ Berman은 집행의 제도적 환경을 크게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구분한다.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현장의 조직들에 영향을 미쳐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시적 집행구조는 집행현장의 조직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설계해서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하게 집행해야한다(정정길).      답 : ④

**9. 조직구조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네트워크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사업구조 < 기능구조
- ② 기능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매트릭스구조 < 네트워크구조
- ③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 ④ 기능구조 < 매트릭스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해설 : ③의 순으로 유기적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548페이지).      답 : ③

\* 조직구조의 모형(Daft, 1998) - 2013 비타민행정학 548페이지



**10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하우스(R.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 ③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해설 : ②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다. 즉 부하가 과업목표, 계획,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과업과 그들에 대한 역할기대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 부하의 역할명료성이 높아지며, 또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④ Kerr & Jermier의 리더십 대체물 접근론(리더십대체이론)은 전통적 리더십이론과 달리, 많은 상황에서 리더의 행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리더가 취하는 행동을 필요 없게 하거나 행동의 효과를 약화 내지 중화시키는 부하의 특성으로는 부하의 능력, 경험, 훈련, 지식, 독립에 대한 욕구, 전문가 지향 성향,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부하는 리더의 지시가 거의 필요 없고 나아가 그러한 지시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문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므로 틀린 지문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649페이지). 답 : ④

**11.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 ②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해설 :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에서 깊게 출제되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684페이지). 답 : ①

정보공개법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비서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2.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④ 업무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 ② 전문행정가를 중시하는 직위분류제는 직급명세서에 의거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 전직과 전보가 제한되므로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낮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곤란하다.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계급제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772페이지). 답 : ②

**13.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장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 ②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 ③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 ④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해설 : 제안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조직운영이나 업무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 들여 이를 심사하고 채택된 제안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계층의 직원의 참여가 요구되며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상향적 의사전달(하의상달)의 통로이다. ② 비공식집단의 활성화는 직접적 효용으로 볼 수 없다(2013 비타민행정학 844페이지). 답 : ②

**14.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 ②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 ④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해설 : ①은 부정행위, ②는 비윤리적 행위, ④는 무사안일에 해당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은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로서 본지문은 적절한 예이므로 맞는 지문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886페이지). 답 : ③

**\* 행정권의 오용(誤用) - Nigro(2013 비타민행정학 886페이지)**

- 개념 : 행정권의 오용이란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현대로 갈수록 행정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심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재량권 또한 커지게 됨으로써 오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 주의 재량권 증대는 오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재량권 행사 자체가 오용은 아님
- 오용의 유형
  - 부정행위 : 영수증 허위작성, 공금의 횡령 등
  - 비윤리적 행위 :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
  - 법규의 경시 : 법규를 무시하거나 현실적 구실을 앞세워 법규대로 시행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
  -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
  - 불공정한 인사 : 기관장이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는 행위

- ⑥ 무능 :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⑦ 실책의 은폐 : 공무원들이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거나 의회나 시민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 ⑧ 무사안일 : 명백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6. 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 ③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④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해설 : 복식부기방식은 하나의 거래를 인과관계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기록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록한다. ④ 복식부기에서 부채의 경우 아직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을지라도 공식적으로 표기(부채증가는 대변, 부채감소는 차변에 기록)하므로 재정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부채가 증가하면 재정이 전진하지 않은 것으로 결산된다(2013 비타민행정학 933페이지). 답 : ④

**15. 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기획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 지향적 이다.
-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해설 : ④ 품목별예산은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투입만 파악할 수 있고 지출의 목적인 산출(성과)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능률성 또는 효율성 판단이 곤란하다. 효율성판단이 가능하게 된 것은 투입과 산출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주의예산(PBS) 부터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986페이지). 답 : ④

**17. 신중양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해설 : ① 리우선언은 신중양집권화 요인이 아니라 신지방분권화 요인이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의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방의제(Local Agenda 21)를 채택하였다. 이후 각국은 이 선언에 입각하여 경제개발 일변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로, 그리고 중앙정부중심의 개발방식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의 파트너십에 의한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선언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채택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2001

년 1월 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12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채택하였고, 전국조직으로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는 신중양집권화 요인에 해당된다(2013 비타민행정학 1103페이지). 답 : ①

**1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 ②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해설 : 재정자립도는 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상태를 파악하는 지표이므로 틀린 지문이다(2013 비타민행정학 1246페이지). 답 : ③

\* 재정자립도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주재원}}{\text{총재원}} \times 100 = \frac{\text{자주재원}}{\text{자주재원} + \text{의존재원}} \times 100$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1 - \text{지방채}}{\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Rightarrow \text{「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

**19.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 ④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해설 : ② 영미계 선진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여기서는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명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재량권과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2013 비타민행정학 238, 1296페이지). 답 : ②

**20. 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세외수입과 지방채를 별도로 구분하므로 정부공식 중 세외수입에는 지방채가 포함되지 않음

- ②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 ③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설 : ④ 행정개혁은 한 차례의 단절적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013 비타민행정학 1288페이지). 답 : ④